

# 한국인의 복지 태도: 특성과 추세



Koreans' Welfare Attitude: Characteristics and Trend

안상훈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은 전문가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개인들의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따라 그러한 태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복지국가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와 개별 정책에 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발전과 정책의 도입에 따라 태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최적화된 자료가 복지패널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이다. 이 글에서는 복지정치의 정책적 의미와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후, 주요 항목들과 관련된 복지 태도의 변화상을 자료가 확보된 4개 시점을 중심으로 개괄하였다.

## 1. 들어가며

새천년에 들어설 무렵 4% 정도에 머물던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017년 기준 10.6%를 기록하였다. 2020년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액은 181조 6000억 원이다. 정부 총 예산 513조 5000억 원 중 35.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수치인데, 앞으로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데다 한국에서의 복지정치가 상당한 힘을 갖고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를 접한다는 사실에서 이 같은 증가세를 유추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에서 파생된 존재이다. 따라서 '복지'는 곧 정치(politics matters)이다(Ahn, 2000; 안상훈, 2017). 복지의 시작은 계급이나 계층 질

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균열 속에서 이루어지곤 하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복지 확대의 양상에 따라 복지정치의 균열 자체가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후의 복지국가 변화 방향은 복지 확대 과정에서 노정된 새로운 균열에 의해 결정되곤 한다. 이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정치적 환류효과(policy feedback effect)이다(Esping-Andersen, 1990). 물론, 구체적인 정책 개발은 전문가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 목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합리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거대한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되는 국민적 요구와 그러한 요구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과 관계가 깊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치의 힘(politics against markets)’이 작동되는 순간들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빛을 받게 된다(Esping-Andersen, 1985).

복지가 정치이고, 복지 확대로 재설정되는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복지에 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또 정책 실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일이 된다. 이에 관한 경험적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이 글에서 분석에 활용한 복지패널조사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이다.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2007년 2차 조사부터 시작해 5차(2010), 8차(2013), 11차(2016)까지

공개되어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복지인식을 탐구한 연구들은 20여 편에 이른다.<sup>1)</sup> 대중을 이루는 연구는 복지정치의 주관적 종속변수로서 계급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위변수를 투입하여 복지 태도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거나 세대 간 차이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들이다(김영순, 노정호, 2017; 김운태, 서재욱, 2017; 김이수, 2015; 김정근, 2017; 김희자, 2013; 손병돈, 2016; 윤상용, 홍재은, 김보미, 2018; 이미선, 2018; 이선정, 김정석, 2017; 전희정, 서동희, 2015; 정운태, 2018). 대부분 연구들이 단일 차수의 횡단 분석을 시도한 가운데 상이한 차수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시기 간 비교를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한다(남재욱, 신혜리, 2017; 박종구, 이보라, 2015; 박종훈, 2017; 양정승, 2017; 여유진, 김영순, 2015; 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황동진, 2017). 다만, 응답자 개인들이 정책 경험 전후로 어떤 태도상의 차이가 나는지 등의 질문에 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질문 항목들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과 연동되어 제시된 까닭에 한국을 넘어 국제 비교를 시도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으나(이상은, 김희찬, 2019), 아직 이 자료를 활용한 국제 비교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관한 관심 환기 차원에서 학술적 이슈보다는 상식적으로도

1) 개별 연구에 관한 참고문헌 제시는 지면 제약으로 생략한다. 복지패널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www.koweps.re.kr:442/research/infect/list.do>, <https://www.koweps.re.kr:442/notice/common/list.do>

흥미로운 관찰을 시도하였다. 2차, 5차, 8차, 11차의 네 시점을 기준으로 복지에 관한 국민 인식의 평균적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였으며, 이를 위해 횡단표본가중치를 사용하였다. 한편, 복지패널은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층과 일반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노정하는지 비교하는데 충분한 사례 수를 담보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양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엿보이는 경우 그 내용도 살펴볼 것이다.

## 2. 한국인의 복지인식, 그 특성과 변화

복지패널의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2016년 기준 총 21문항에 걸쳐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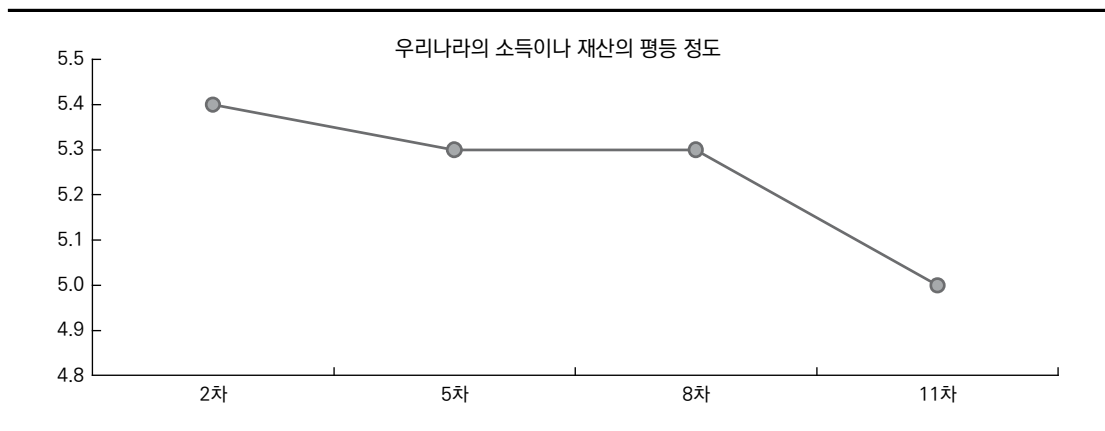
인식과 태도, 복지 재원 및 대상 범위, 정치 참여와 성향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포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불평등, 성장과 복지, 증세와 복지 재원, 보편과 선별, 가족의 역할, 사회정책 분야별 평가 순으로 한국인의 복지인식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 저소득층과 일반 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불평등 인식

불평등 문제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목표의 하나이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국민 인식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복지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관한 근원적인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

그림 1.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평등, 4=중간, 7=매우 불평등)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평등하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중간 점수인 4점보다 높은 5점 이상의 값을 보인다. 다만, 2차인 2007년에서 11차 연도인 2016년까지의 전체 조사 기간을 놓고 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덜 불평등하다고 보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복지 확대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에도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복지국가는 아직 할 일이 남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저소득 집단과 일반 집단으로 나눠서 볼 경우,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불평등 쪽으로 편포되며, 저소득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하다는 쪽으로 편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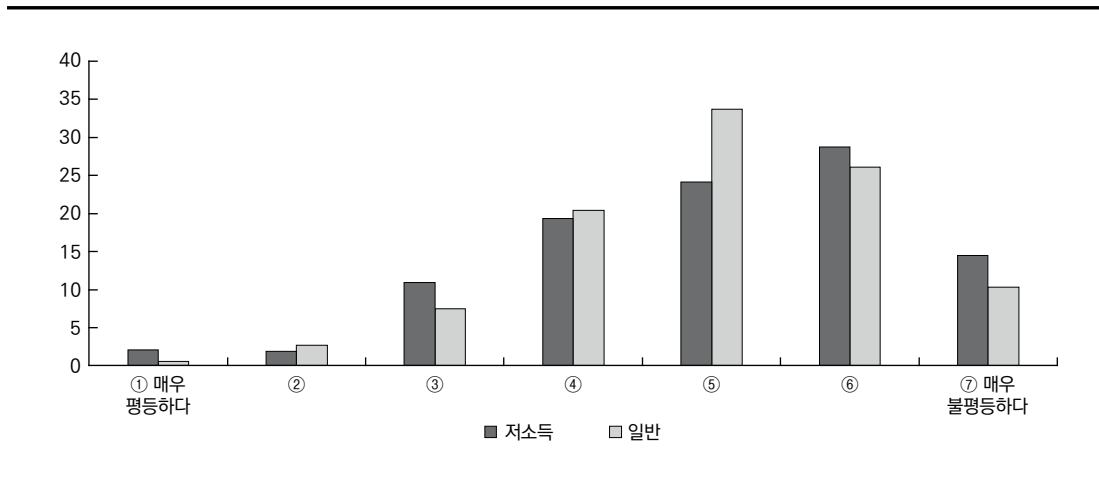
### 나. 성장과 복지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은 한국에서 복지정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를 관통해 온 이슈일 것이다. 발전국가 시대 성공적인 산업화의 유산으로서 ‘성장중심론’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정향은 지금 이 시점에도 한국형 복지정치의 특징을 대표하며, 성장이나 복지에 관한 무게중심의 설정 문제는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균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안상훈, 2012).

이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유럽병이나 복지병의 이름으로 복지 확대를 경계한 신자유주의 담론과 관련된다. ‘복지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명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처음에는 약간 부정하는 의견에서 출발하여 점차 4점 내외

그림 2. 불평등 인식의 소득계층 간 차이

(1=매우 평등, 4=중간, 7=매우 불평등)



자료: 한국복지매널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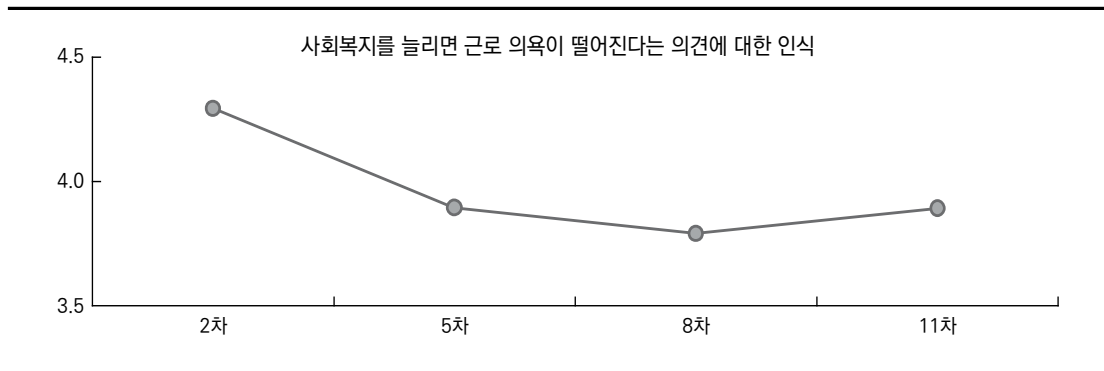
의 중도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발전국가 시대 고성장 경험에 관한 긍정적 회고와 여전히 계속되는 성장중심론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사회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인식 정향일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이나 정치권

을 중심으로 성장이나 복지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한국의 복지국가 논쟁이 점철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인식은 성장이 좀 더 중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하여 둘 다 중요하다는 중도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림 3. 복지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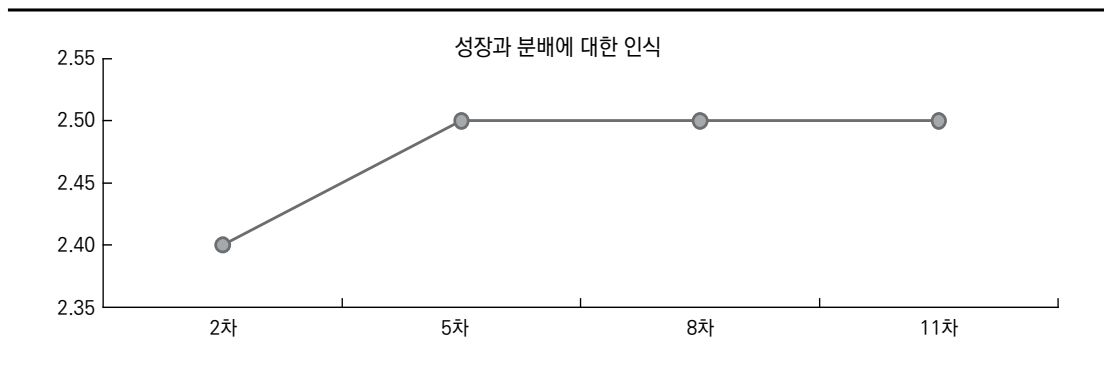
(1=매우 그렇다, 7=전혀 그렇지 않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그림 4. 성장 대 분배**

(1=성장만 중요하다, 4=분배만 중요하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묻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질문에 대한 국민 인식은 2007년에는 동의에서 출발하지만, 이후에는 점차 중도적인 견해로 고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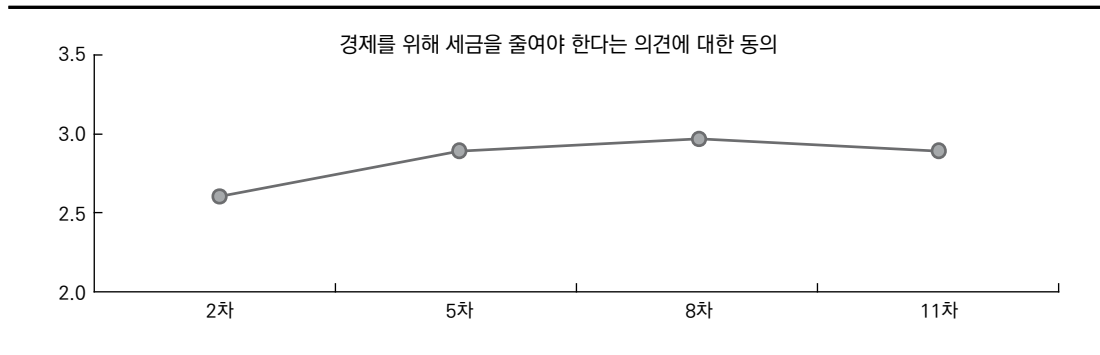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

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립적 의견에서 출발하여 약간의 동의로 변화한 후 가장 최근 차수 조사에서는 다시금 중도 의견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성장이나 분배나 혹은 성장

**그림 5.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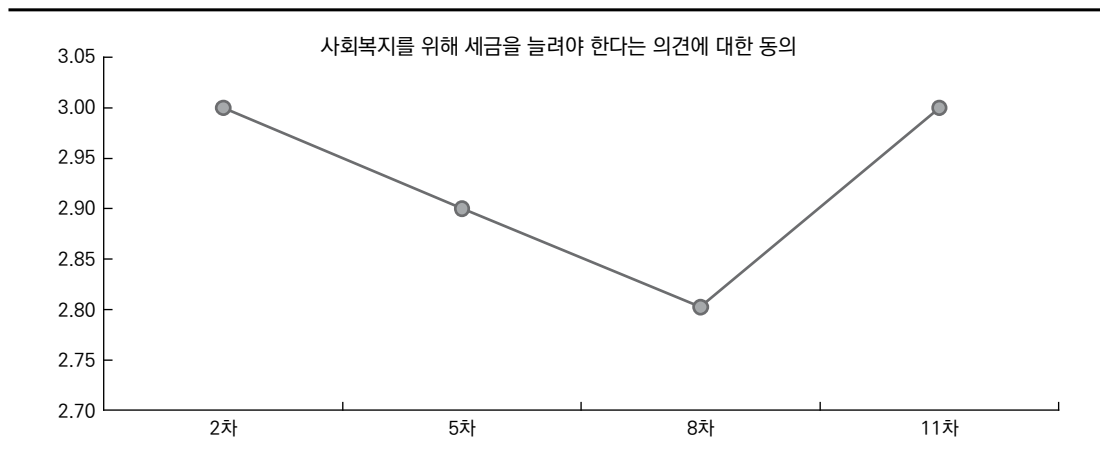
(1=매우 동의, 5=매우 반대)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그림 6.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1=매우 동의, 5=매우 반대)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이나 복지나 의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중도적인 성향을 보인다. 과거에는 성장중심론이 거셌던 반면, 2010년 이후 복지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더는 성장만이 답이라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복지 확대에만 매진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지도 않는데, 이를 보면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복지 확대 경쟁을 보이는 상황이 언뜻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정치권의 복지 확대 경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성장과 복지의 동시적 추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는 좋은 복지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전략을 추구하라는 주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증세와 복지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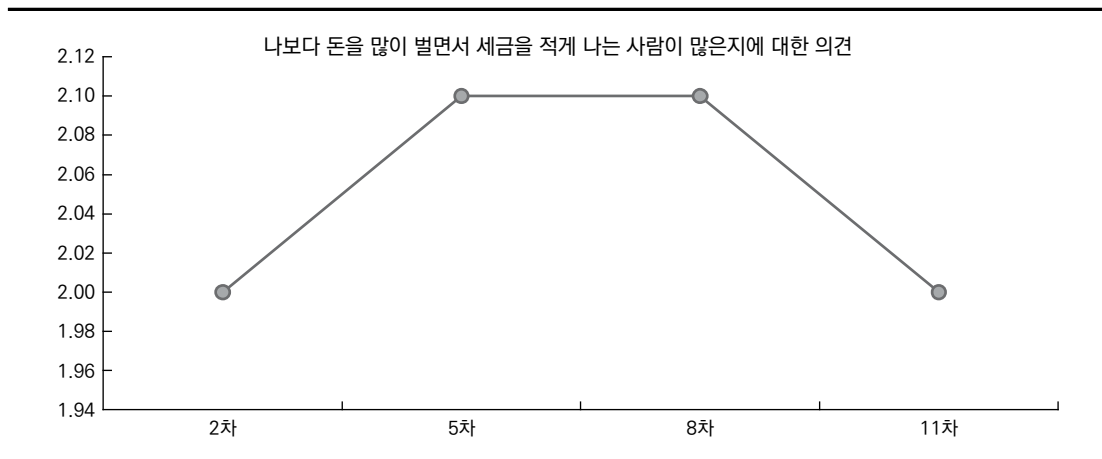
조세정의는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반발을 줄

이는 데 매우 핵심적인 사안의 하나이다.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차별로 약간의 등락이 보이는 하나 정도는 미미하다(그림 7).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서 증세 전략이 정치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회의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 결과다.

우리는 앞에서 대단히 중도적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더해 복지를 어느 정도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중론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지,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8]에 나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견해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견해가 점점

그림 7.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

(1=매우 그렇다, 4=보통이다, 7=전혀 그렇지 않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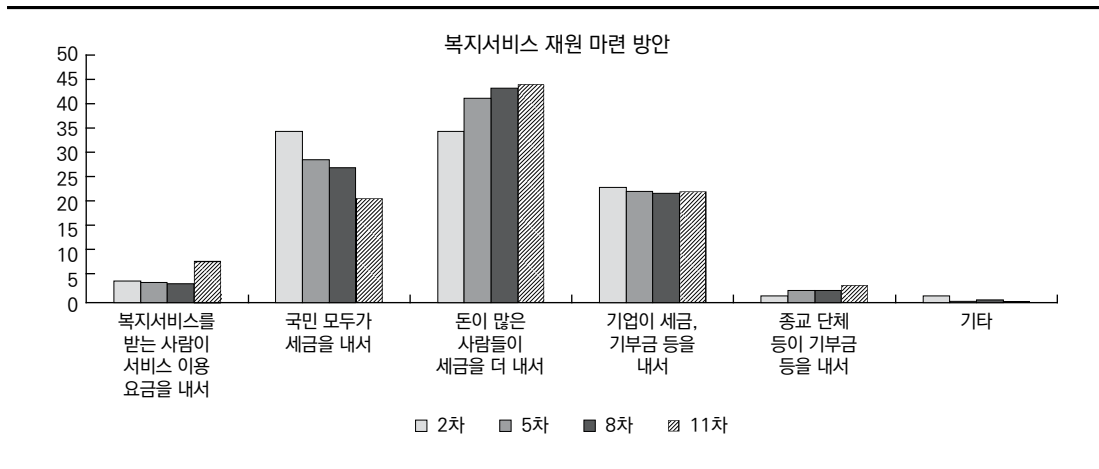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편, 기업의 역할을 주문하는 비율도 20% 선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에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종교단체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전반

적으로 그 비중이 크진 않지만, 가시적인 증가 경향을 보인다.

복지 자원 마련에 관한 [그림 9]의 질문과 관련해, 복지패널조사의 저소득 집단과 일반 집단

**그림 8. 복지서비스의 자원(전체 응답자 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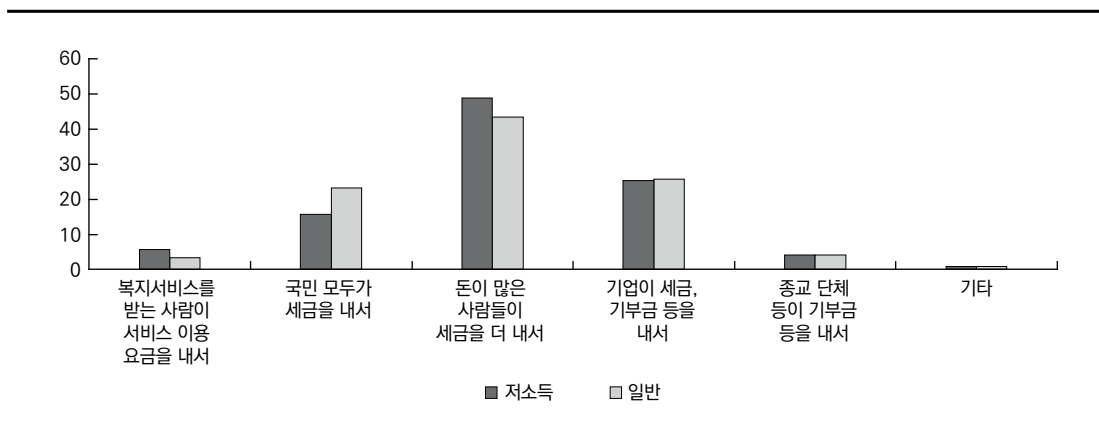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그림 9. 복지서비스 자원 마련에 대한 인식 차이(집단별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복지패널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사이에서 흥미로운 차이가 목도된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은 저소득 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한편,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저소득 집단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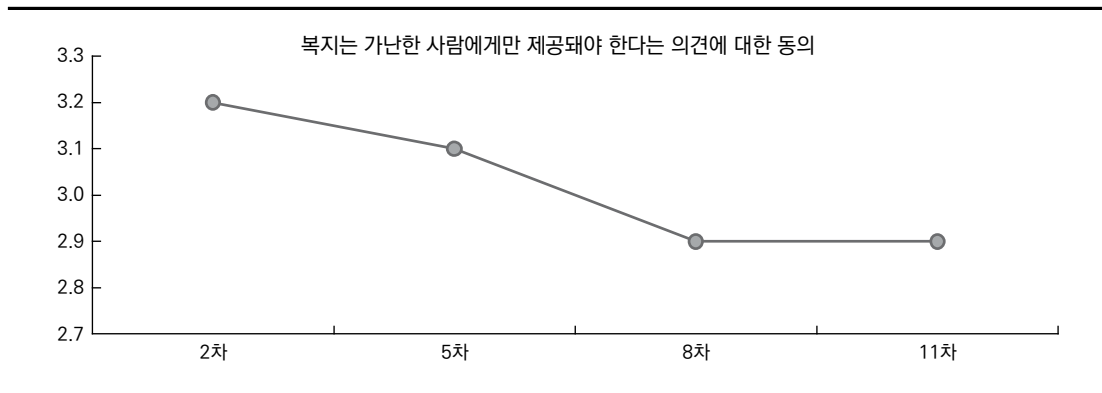
라. 보편 대 선별

복지 확대의 대상에 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

의는 한국 복지정치에서 상당히 뜨거운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10]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대체로 중도적이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그 모양이 2차 조사 연도인 2007년에는 ‘반대’ 쪽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찬성’ 쪽으로 기울어 가는 형세를 보인다.

그림 10. 선별주의

(1=매우 동의, 5=매우 반대)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마. 가족의 역할

복지 제공의 주체에 관한 복지국가론의 논의를 보면, 시장과 국가와 동일 선상에 두고 가족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뤄 왔음을 알 수 있다(Esping-Andersen, 1990).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가족 내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해석된다는 페미니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복지

를 논할 때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종류의 질문에 대한 응답 경향을 확인해 보자. [그림 12]에 제시된 응답 결과는 매우 동의(1)에서 매우 반대(5)까지의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이다.

먼저,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주제에 대한 응답을 보자. 2차에서 5차로 가면서 동의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

른 사회조사에서도 공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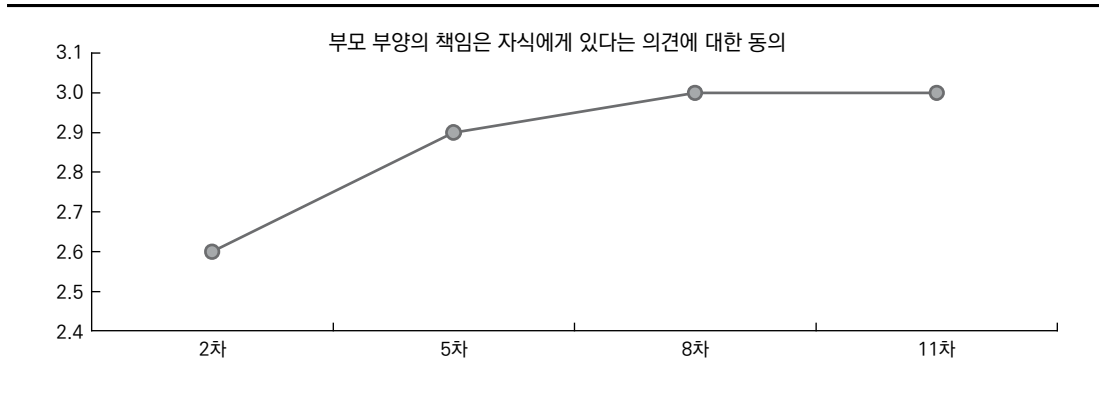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동의하는 쪽으로 경도된 상태이긴 하지만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두 종류의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자

녀 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일방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 정도로 볼 여지도 있다.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돌봄 제공이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림

**그림 11. 부모 부양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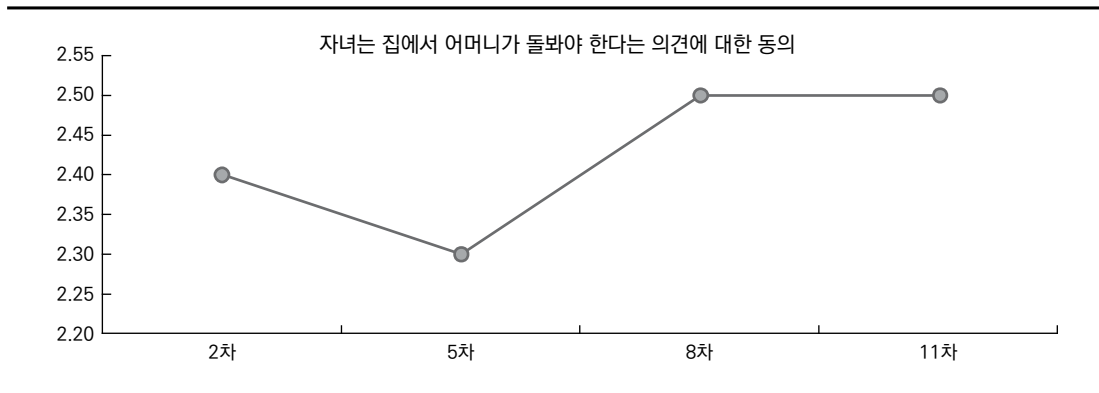
(1=매우 동의, 5=매우 반대)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그림 12. 어머니에 의한 어린 자녀 양육**

(1=매우 동의, 5=매우 반대)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13]에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동의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반대 의견으로의 변화가 약한 수준에서나마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무상보육 시행 이후 나타난다는 점이다. 제도 시행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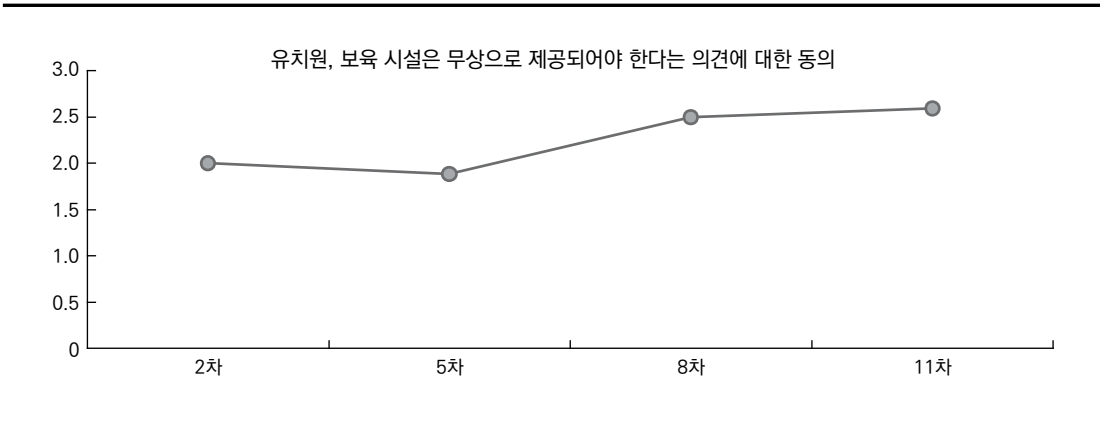
후, 무상 방식에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이 잠재된 결과라 여겨진다.

바. 사회정책 분야별 평가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복지국가에 관한 전반

그림 13. 무상 유치원과 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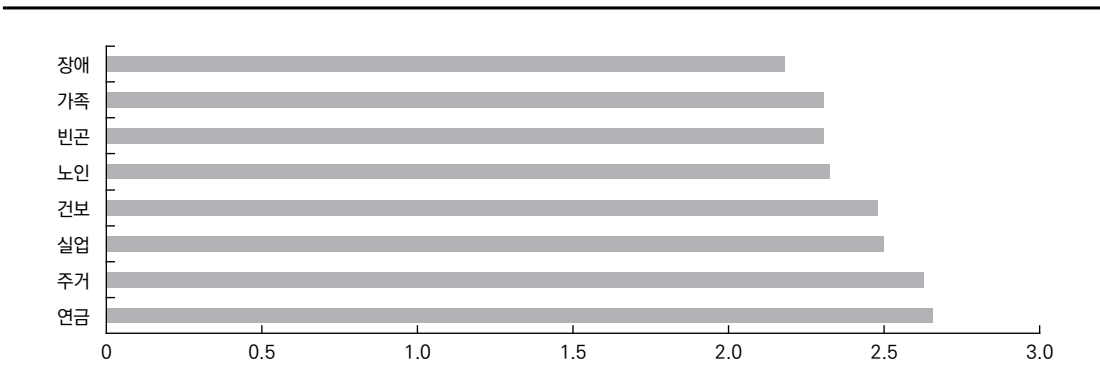
(1=매우 동의, 5=매우 반대)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그림 14. 분야별 지출 지지에 관한 4차례 조사의 평균

(1=훨씬 더 많이 지출, 3=현재 수준으로 지출, 5=훨씬 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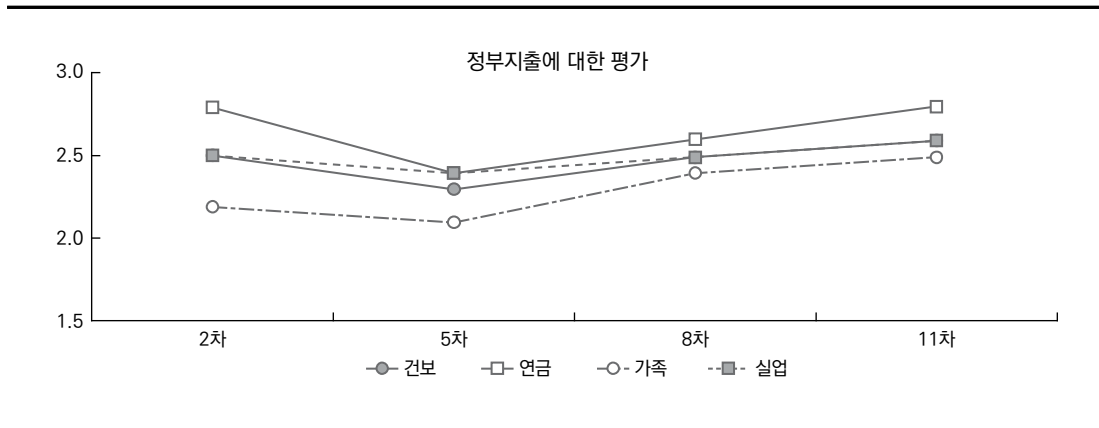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복지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정책 분야의 정부 지출에 대해 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묻은 질문에 대한 응답의 변화를 살펴보자. 거의 전 분야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편이지만, 연금이나 주거보다는 장애인 가족 빈곤 분야에 좀 더 지출해야 한다는 이견도 있다(그림 14). 변화에 관한 결과를 보면, 분야에 따라 차수별 평균값 변화의 패턴이 두 종류로 대별된다.

그림 15. 정부 지출 평가(변화 유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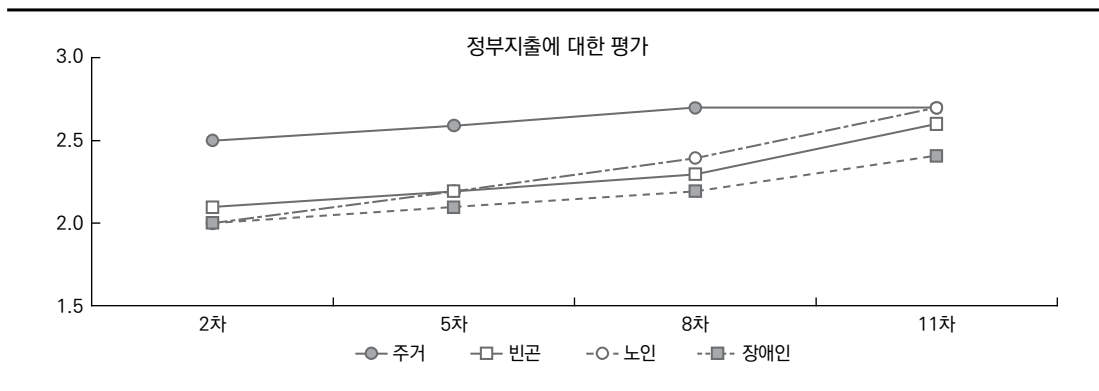
(1=매우 동의, 5=매우 반대)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그림 16. 정부 지출 평가(변화 유형 2)

(1=매우 동의, 5=매우 반대)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저자가 분석함.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한 후 다시금 현재 수준 정도면 된다는 쪽으로 회귀한 분야(변화 유형 1)는 건보, 연금, 가족, 실업 분야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출발한 후 현재 수준 정도면 된다는 쪽으로 꾸준히 의견이 변화한 분야(변화 유형 2)는 주거, 빈곤, 노인, 장애인 정책 분야이다.

### 3.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복지패널의 부가조사 중 복지인식에 관한 자료를 통해 한국인의 복지인식이 지니는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과 연결 지어 전후 비교를 논하기에는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이 피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특성과 변화의 방향성,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이에 관한 내용은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 속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 주는 인식의 전반적인 정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보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는 복지국가 확대의 정당성을 옹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 분석에 포함된 시기 동안 이루어진 복지 확대 덕분인지 불평등 인식이 살짝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앞으로의 복지 확대를 통해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둘째, 성장과 분배의 동시적 추구를 원하는, 대단히 증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성장과 마

찰을 빚을 수 있는 단순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 고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 찾기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조세 부정의에 관한 인식이 두드러진다. 돈 많은 사람이나 기업이 복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보면 개세(皆稅)주의적인 보편 증세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목소리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진다.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증세를 미룰 수 없는 만큼 이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무상보육에 관한 회의론이 엿보이는 등 선별주의가 일부 강화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조건적인 보편주의에서 벗어나 질 좋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보편주의로 하되, 부담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재원 마련의 선별주의와 서비스 공급의 보편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종류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부모 부양 책임을 자식이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인 부양에 관한 사회적 준비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어린 자녀 양육에서는 모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양육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해 보인다.

여섯째, 사회정책의 여러 분야 중 연금이나 주거보다는 장애, 가족, 빈곤 쪽을 더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아마도 복지 확대에서 우선

순위를 사회적 약자에 두라는 주문일 것이다.

사회정책이란 것은 전문적 진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치를 배제한 채 ‘진공상태’에서만 관리될 수는 없는 복잡물이 사회정책인 것이다(안상훈, 2017).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를 상정할 때, 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최선의 정책 대안이 정치적으로도 선택되게끔 하려면, 국민이 복지 관련 정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가공·확산하고 소통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기반의 정책화를 뒷받침할 학술적 노력이다.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횡단 분석을 넘어 정책과 연결된 종단연구로 확장되고, 국제 비교를 포함한 일반화 지향의 학술적 노력으로 진화하길 기대해 본다. ■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참고문헌

- 안상훈. (2012). 복지정치 활성화 과정에서의 국민인식 변화 연구. 재정포럼, 189, 61-73.
- 안상훈. (2017). 제1장 복지인식의 정치와 사회 정책의 성과관리. 복지국가의 전환기, 사회 지출의 성과는?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Ahn, S. H. (2000).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Univesitetstryckeriet.
- Esping-Andersen, G.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